

북한 로켓 발사의 영향과 대응 전략

2009. 4. 3.

1. 로켓 발사 현황과 배경
2. 과거 긴장 국면의 유형과 전개 과정
3. 금번 긴장 사태 전개 전망과 영향
4. 정부의 대응 과제

< 참고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주요 일지

□ 북한 로켓 발사의 영향과 대응 전략

1. 로켓 발사 현황과 배경

(발사 시기) 북한은 로켓 발사를 위해 추진체 조립을 마무리 하고 연료를 주입한 상태여서 빠르면 4월 4일에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상으로는 4월 4일도 가능하고, 날씨를 고려하면 4월 6~8일이 가능성이 높다. 발사 형태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 의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켓 물체는 2006년에 실패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발사 의도는 3~4월의 대내외 주요 행사를 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압박용 등 대내외 다목적용인 것으로 보인다.

2. 과거 긴장 국면의 유형과 전개 과정

(과거 유형 분석) 북한 도발은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내용의 기본 목표 하에 대남용, 대미용, 그리고 이의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 대남용 도발의 대표적 사례는 단거리 미사일과 1, 2차 연평해전 등으로, 한미 모두 상황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는 '의도형 무시'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 및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내·대미용 도발은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형태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 '긴장 고조 -도발 -북미 대화 -해결' 과정으로 대처하였다. 도발 후 합의 도출 기간은 남한은 물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집권과는 무관하게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남한 정부는 당시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금번 긴장 사태 전개 전망과 영향

(현 상황의 평가) 이번 발사의 의도는 내부 체제 결속과 대미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대내·대미용'과 함께, 대남용도 포함된 복합형으로 보인다. 대내외 정세 측면에서는 노동1호 발사 시기(1993년)와 유사하다. 이는 한·미의 정권 교체 초기와 북한 김 위원장의 재추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발사 형태에 있어서는 북한이 위성발사체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포동 1호 발사 때 (1998년)와 유사하다. 다만, 북미 당국간 회담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1호 때와 상이하다.

(국제사회의 예상 대응 조치) 발사체의 위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가 결정되며, 위성일 경우에는 제재 적용 여부에 논란 소지가 있다. 한·미 일은 위성 발사도 UN 제재나 요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의 판정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요격의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위성 발사는 '비난' 수준에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기존 제재조치의 엄격한 적용 외에도 무역 금융 부문에서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의 예상 행동에 대한 미·일 등의 국제사회 대응 유형에 따라 '타협-긴장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며, 긴장 국면 가능

성이 가장 높다. 타협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발사 유예에 대해 북미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져 타협을 모색하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긴장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제재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경우로 가능성이 높다. 위기 시나리오는 북한이 위성 발사 후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경제 사회 영향) 남북 관계는 발사 후 북미 관계 진전과는 무관하게 대화 중단 상태의 중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 경협이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증가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 중장기화가 우려된다. 정치 사회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 심화와 군사적 위협 고조로 남북 관계가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높다.

4. 정부의 대응 과제

정부는 북한의 발사 유예를 끝까지 유도하는 한편, 발사 후에도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물론, 중·러 등 주변국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 모색을 통해 북한의 발사 저지에 외교적 총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도발 이후에는 통미봉남과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온 만큼, 경수로 비용만 부담한 YS시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

셋째,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남북 관계 모멘텀을 유지하며, 정경분리 원칙으로 민간 경협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국내 중소기업의 탈출구와 녹색 성장 시범 단지로 활용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을 단순한 위협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남북 경협을 한반도의 평화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산림녹화 공약 사업을 통한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시중 유동성 부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북한 로켓 발사의 영향과 대응 전략 >

로켓 발사 시기와 배경

발사 시기	- 추진체 조립을 마무리하고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빠르면 4월 4일에 발사할 예정
발사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 : 김 위원장의 건재함 과시, 한미 양측에 대한 압박 등 대내외 다목적용 · 대내적 : 3~4월 주요 행사를 기해 체제의 건재함과 내부 결속 강화를 대내외 과시 · 대외적 : 한미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압박용 의도 · 기타 :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해 미사일 상품 가치의 홍보 수단 활용



긴장 사태 전개 전망

과거 유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도발은 체제 결속 위한 대내용의 기본 목표 하에 대남용, 대미용, 복합형으로 구분 · 대내·대남용 : 단거리 미사일, 1, 2차 연평해전 · 대내·대미용 :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현 상황 전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체제 결속과 대미 협상력 제고, 대남 압박 등의 의도가 포함된 복합형 도발 - 국제사회의 예상 대응 조치 · 위성일 경우 '비난'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 존재 · 미사일 발사시 기존 제재 조치의 엄격한 적용외에 무역-금융 부문의 추가 제재 예상 - 시나리오 : 타협-긴장-위기 시나리오 가운데 긴장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음 · 긴장 시나리오 :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제재함으로써 긴장 국면 조성
남북 관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경협 축소 및 중단, 한국 경제 회복 지연 및 침체 중장기화 - [정치·사회] 남북 관계 단절 국면, 한반도 긴장 위기 조성



정부의 대응 과제

- ◆ '대화화 타협'의 유화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 긴장도를 최대한 완화
 -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 주력
 - 발사 후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 채널 모색
 -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 측면 지원
 - 북한을 중소기업 탈출구와 녹색 성장 시범 단지로 활용
 - 국내 경제 침체의 중장기화 방지를 위해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

1. 로켓 발사 현황과 배경

○ (현황) 북한은 로켓 발사를 위해 추진체 조립을 마무리하고 연료를 주입한 상태여서 4월 4~8일 발사할 것으로 보임

- 이번 로켓 물체는 2006년에 실패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추정
 - 대포동 2호는 사거리 약 6,000km로, 함경북도 무수단리로 운반된 상태
 - 기술적으로는 발사대 장착과 연료 주입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4월 4일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상으로는 4월 4일, 날씨를 고려하면 4월 6~8일이 가능성이 높음
- 발사 형태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의도) 로켓 발사는 김 위원장의 건재함 과시는 물론, 한·미 양측에 대한 압박 등의 대내외 다목적용으로 해석

- **대내적** : 3~4월의 북한 내 주요 행사를 기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건재함과 내부 결속 강화를 대내외 과시하기 위함
 - 미사일 주권과 '군사 강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여 체제 결속 강화
 - **주요 행사**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 8)와 4월초 전체회의를 통한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김 주석의 생일(4. 15), 인민군 창설일(4. 25) 등이 예정
- **대외적** : 한·미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압박용 의도가 강함 (3월 9~20일의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와 4월중 한미정상회담 예정)
 -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대북 관심 끌기'와 집권 2기의 MB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전환 촉구 의도도 포함
 - 특히, 대북 정책 재검토와 대북 라인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긴장 고조를 통한 '대미 협상용' 카드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판단
- **기타** :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해 미사일 상품 가치의 홍보 수단 활용
 - 장거리 미사일은 로열티와 부품 수출로 연 10~15억 달러의 외화벌이 사업
 -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클레어몬트' 연구소는 북한이 중동 지역에 스커드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연 1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주장

2. 과거 긴장 국면의 유형과 전개 과정

- (과거 유형 분석) 그간의 북한 도발은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내용'의 기본 목표 하에 대남용, 대미용, 그리고 이의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내·대남용
 - 대내용은 체제 결속 강화, 대남용은 남북 관계의 주도권 확보
 - 대내·대미용
 - 대미용은 북미 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및 지원 확보
 - 복합형 : 대내·대미·대남용
- (대내·대남용 도발) 한미 모두 상황 악화 방지에 초점에 두는 '의도형 무시'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 및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대내·대남용의 대표적 사례는 단거리 미사일과 1, 2차 연평해전 등임
 -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간주하여 무시
 - 연평해전의 경우에는 두 차례 모두 DJ 정부의 포용정책과 당국간 대화 및 남북 경협 진행 등으로 도발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1차 연평해전(99. 6. 15) : 도발 직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예정된 남북차관급 회담은 계속되었고, 이는 남북정상회담(00. 6. 15)으로 이어짐
 - 2차 연평해전(02. 6. 29) : 도발 후 1달 만에 북한의 先대화 제의와 유감 표명(02. 7. 25)이 있었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2. 8)와 철도 연결공사 착공(02. 9) 등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
- (대내·대미용 도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 '긴장 고조 - 도발 - 북미 대화 - 해결' 과정으로 대처했으며, 도발 후 합의 도출 기간은 남한은 물론 미국의 공화당-민주당과는 무관하게 점차 짧아지고 있음
 - 노동1호 발사(93. 5. 29) : 도발 17개월만에 북미 제네바 합의 도출(94. 10. 21)
 -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해체에 대해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및 에너지 공급 약속에 합의
 - 대포동 미사일 발사(98. 8. 31) : 1년만에 북미 베를린 합의 도출(99. 9. 12)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에 대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발표
 - 대포동2호 발사(06. 7. 5) 및 핵실험(06. 10. 3) : 핵실험 3개월 만에 북미 베를린 합의(07. 1. 18)와 2.13 합의(2007)를 도출

- 베를린 합의(07. 1. 18)는 미국의 30일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제재 해제에 대해 북한의 60일 내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 등이 주내용임
- 2.13 합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6자회담 회원국들이 중유 100만 톤에 상당하는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임

○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남북 관계) 남한 정부는 당시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자'와 '조정자' 위치에 처함

- 노동 1호 발사(1993) 당시,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만 부담
 -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과 YS 정부의 '先 북핵 해결, 後 남북 대화' 원칙에 의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
- 반면, 대포동 2호 발사(2006)와 2.13 합의 도출 시에는 한국이 6자회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
 - 이때는 정부가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도모하고 당국간 회담도 이어가던 시기로, UN 안보리 제재 결의 지지 성명에도 참가하여 국제공조 도모

< 표 1 > 북한의 도발과 사태 해결 과정

		대내·대남용		대내·대미용			복합형	
		1차 연평해전 (99.6.15)	2차 연평해전 (02.6.29)	노동1호 (93.5.29)	대포동 (98.8.31)	대포동2호(06.7.5) 및 핵실험(06.10.9)		현 상황
대외 환경	미국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남한	진보	진보	보수	진보	진보		보수
해결 과정	장성급회담	북한 유감 표명 (先 대화 제의)	북미 대화 노력	북미 대화 노력	북미 대화		-	
해결 기간	발생 직후 남북대화 지속	1달 만에 남북대화 지속	3일만에 북미고위급 회담	10일만에 북미고위급 회담	10일만에 UN 안보리 1695호	5일만에 UN 안보리 1718호	-	
합의 도출	-DJ, 7개월후 정상회담 제의 -1년만에 6.15공동선언	-2달만에 남북 경협추진총 개최	17달만에 제네바합의	1년만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핵 이후 3달만에 북미 베를린 합의 4달만에 2.13 합의		-	

3. 금번 긴장 사태 전개 전망과 영향

1) 현 긴장 상황의 평가

○ (평가)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노동 1호(1993년)와 유사하나, 발사 형태에 있어서는 인공위성의 대포동 1호(1998년)와 유사

- 발사 의도는 내부 체제 결속과 대미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대내·대미용'과 함께, 대남용도 포함된 복합형(대내·대미·대남용)으로 평가
 - 북한은 6자회담에서의 유리한 위치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보다 많은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전망
 - 김 위원장 집권 3기 체제 출범을 맞아 체제 결속 목적도 매우 중요
 - 특히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위성발사체)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어, 대남용이 포함된 복합형으로 평가 가능

- 대내외 주변 정세 측면에서는 1993년 노동 1호 발사 때(1993년)와 유사
 - 시기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 집권 초기, 한국의 보수 정권 집권, 북한의 김 위원장 집권 등의 여건이 현재 상황과 유사
 - 미국 :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모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집권 초기 상황
 - 한국 : YS와 MB 보수 정권의 집권기 (대북 정책도 유사 : YS는 先 북핵 해결 後 남북경협 원칙, MB는 비핵·개방 3000 원칙)
 - 북한 : 김 위원장 취임(93. 4. 9)과 김 위원장 재추대 예정(09. 3. 8)

- 발사 형태에 있어서는 북한이 위성발사체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98년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기(1998년)와 유사
 - 이는 위성운반체로 발사할 경우, 대외 과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2006년 UN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피해갈 여지가 있기 때문
 - 실제로 최근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과 '우주 개발의 자주적 권리'를 강조

- 다만 북미 당국간 회담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993년 노동 1호 발사 때와는 차이가 존재
 - 1993년의 경우, 미사일 발사 전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당국간 공식 대화가 없는 상황
 - 다만 민간 차원의 북미 대화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예상 제재 조치

○ 발사체의 위성으로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가 결정되며, 위성발사체일 경우에는 제재 적용 여부에 논란 소지가 있음

- 한·미·일은 위성 발사도 UN 제재나 요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 한·미·일, 프랑스 등은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발사 기술이 유사'하므로 UN 결의안 1718호에 위반되므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 특히 일본은 일본을 향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동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과 지상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
-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되,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양국은 미사일과 위성에 대한 판단 및 제재 찬성 여부에 대해 즉답을 회피
- 현실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의 판정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요격의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음
 - 대포동 2호를 추적할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는 지구 궤도상의 우주 물체만을 감시하므로, 궤도 진입 이전에는 식별할 수 없음
 -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도 2월초에 위성 발사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찬성할 지도 의문시됨
 - 따라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위성발사는 기존 UN 결의안의 재장조 및 '비난'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요격은 성공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대기권 진입 이전의 低고도 단계에서 용이하나, 자칫 미확인 물체의 '선제 공격'으로 비난 소지가 있음

- 현재 북한은 2006년 미사일·핵 실험으로 인해 UN 안보리 제재 중임
 - 대포동2호 발사로 인한 UN안보리 1695호와 핵실험으로 1718호를 적용
 - 북한은 G-8 국가가 모두 참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를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은 PSI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 참여 중임

○ 다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은 무역·금융 부문에서 기존 제재 조치의 엄격한 적용 외에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

-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는 UN결의 1718호 및 PSI의 엄격한 적용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 선박 수색 및 자금 동결 등의 강화로 무역·금융 면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미 교역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제공이 불가능해질 것임
 -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어떤 형태의 발사체이든 ① UN 결의안 1695호 및 1718호 적용과 ② UN헌장의 제7장 42조의 군사제재 ③ 애국법에 근거한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주장
- ※ 애국법(US Patriot)은 테러혐의자에 대해 수색영장 없이 수색 가능할 뿐 아니라, 제311조에 근거하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여 북한을 압박 가능

< 표 2 > 예상 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UN 대북 결의 1718호	남한의 PSI 참여 확대	테러지원국 재지정
근거	- 현재 적용되는 결의문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지 - 미사일 발사 시 더욱 엄격히 적용될 예상	- 현재 한국은 부분 참여중 - 미국의 참여 확대 권유와 유명한 장관의 긍정적 검토 발언 존재	-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근거의 하나인 反국제테러조약에 가입 상태 - 조약에는 핵물질 보호, 해상항해 안전에 관한 조항 존재
내용	- 중화기, WMD와 관련된 제물품과 사치품의 대북 판매 금지와 자금 동결 - WMD 관련자와 그 가족의 입국과 경유 금지	-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선박이나 항공기 직접 나포 및 수색 등의 활동 - 북한 출입 WMD 관련 선박 수색활동 실시	- 미국의 대북 원조와 국제 금융기관 차관과 같은 금융 제재 심화
북한의 불이익	- WMD 관련 교역 차단, 자금 동결	- WMD 관련 교역 차단	- 대미 교역 및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기대 불가능

주 : UN 제재안 1695호는 회원국들에 대해 미사일 관련물자와 기술, 자금 등의 이동 방지 요청.

3)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전망

○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의 예상 행동에 대한 미·일 등의 국제사회 대응' 유형에 따라 '타협-긴장-위기' 국면의 3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북한의 예상 행동) 향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를 유예하거나 발사 추진, 또는 발사 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의 3가지를 상정
- (국제사회 대응) 미·일과 UN 등의 국제사회는 강경한 군사적 제재나 UN 제재 압박, 대화와 타협의 유화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발사 유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유화적' 대응 가능성이 높으며, 발사 및 추가 도발로 긴장을 높여갈수록 대응은 제재·강경 쪽으로 이동

< 표 3 > 북한의 예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유형

		국제사회의 대응 유형		
		강경(군사 제재)	압박(UN 제재)	유화(대화, 타협)
북한의 예상 행동 유형	발사 유예	경고	구두 압박	대화 주력
	발사 추진	경고	제재	대화 노력
	추가 발사	제재	추가 제재	대화

주 : 강경(군사 제재)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특정 지역의 정밀 타격 등을 의미

- (타협 국면 : 발사 유예 시나리오) 북한의 발사 유예에 대해 북미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져 타협을 모색하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이 핵 검증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회담은 대북 경제 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로 발전될 경우임
 -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 당국간 대화가 없고, 북한의 위성 발사 유인 및 의지가 매우 높아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긴장 국면 : 발사 후 대화 모색)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은 '제재 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경우로,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시도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미·일과 국제사회는 PSI 등 기존의 UN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 다만, 위성 발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반대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미국도 국내 경제 및 중동 현안의 우선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할 경우 '실제 제재'가 아닌 '비난'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 존재
- (위기 국면 : 발사후 추가 도발) 북한이 위성 발사 후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능성 낮음
 - 북한의 추가 위기 고조에 대해, 미·일 등은 UN 결의 등을 통해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무역·금융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임
 - 이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선박의 검문·나포 등 해상 무력 봉쇄(PSI)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도 존재

< 표 4 > 상황별 시나리오 전망

	타협 국면	긴장 국면	위기 국면
북미 북핵 관계	- 북한, 발사 유예 - 6자회담 진전 - 북미 대화 재개	- 북한, 위성운반체 발사 - UN 제재 강화 - 6자회담 지연 - 북미, 대화 교착	- 북한, 위성발사 및 추가 도발(핵실험 등) - 미국 요격 시도 -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 6자 및 북미 대화 차단
남북 관계	- 남북 교류 진전 없음	- 남북 교류 일시 중단	- 남북 교류 전면 중단
가능성	-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높음

○ (종합 전망) 긴장 국면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대화 중단 사태의 중장기화와 국지적 가능성이 우려

- 현 남북 관계는 YS 시절의 노동 1호 발사 때와 유사한 상황임
-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과 정부의 원칙 고수로 당국간 대화 중단이 중장기화되고, 북미 합의 이후의 비용 부담은 남한이 지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서해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과 해안포 발사 등의 도발을 통해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

4)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경제 부문) 남북 경협이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증가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 중장기화 우려

- (남북 경협)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협 사업의 전면 중단 위기 직면
 - 위탁가공을 포함해 반출입과 관련된 물품의 교역의 일시 중단 가능성이 증대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장기화는 물론,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등 투자 협력 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과 투자비 손실 우려
 - 이는 대북 진출 기업들의 생산 및 수주 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부실로 연결되어 줄도산 예상

- (한국 경제) 로켓 발사를 포함한 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위기에 한반도의 리스크 증가와 안보 위기까지 겹쳐 경기 침체 중장기화 우려

- 채무 상환 부담 증가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할 경우의 추가 이자 부담 발생
- 기업 실적 악화 : 국내 경제 심리 악화에 따르는 내수 침체, 국내 거래선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수출 수주 물량 축소 등으로 수익성 악화
- 금융 시장 혼란 : 북한 미사일과 핵문제의 장기화는 국내 금융 시장에 주가 하락, 금리와 환율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외국인 투자 위축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해외 자본 유출과 외자 유치 차질 우려
- 경제 심리 급랭 :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중장기화시킬 것으로 예상

○ (정치·사회문화 부문)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 심화와 군사적 위협 고조로 남북 관계가 단절 위기 상황을 초래

-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가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높음
 - 남북 교류 중단 :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남북 당국간 회담 중단 등 정치·군사 부문의 단절이 경제·사회문화 교류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남남 갈등 심화 :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보수-진보 진영간의 남남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국면 전개에 따르는 남북 관계 영향 >

		경제	정치·군사·사회 문화
북한 행동	타협 국면	- 남북 경협, 현 수준에서 담보	- 북, 통미봉남과 비난 지속 - 남북 관계 경색 지속
	긴장 국면	- 개성공단 사업 및 일반 교역의 일시 중단 - 한국경제 불안정성, 일시 증대	- 북, 통미봉남 가속화 - 남, 대북 정책 변화 환경 악화 - 남북 경색 및 남남갈등 심화 - 해안포, 단거리 미사일 등 국지 도발 - 동북아 관계 입장차 시현(對중·러)
	위기 국면	- 남북 경협, 중단 증장기화 - 외자 유치 차질, 해외자본 유출 - 한반도 리스크 증대, 금융 혼란 - 경제 회복 지연 및 침체 장기화	- 남북 관계, 단절 증장기화 - 군사적 긴장 고조 - 남한, 대북 제재 동참 확대(PSI)

-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의 추가 발사에 한미일의 초강경 대응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등으로 심각한 한반도 위기 조성 우려
 - 작전계획(OPLAN) 5026 현실화 :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공조가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과 예상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강화
 - 소규모 국지전의 발생 : 특히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시에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요격과 발사기지(함경북도 무수단리 시험장) 타격으로 국지전 가능성이 증대

4. 정부의 대응 과제

- (전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 경제의 지속발전가능한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
 - 정부는 대북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한반도 긴장 관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해도 새로운 남북 관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대북 지원 논쟁을 중단할지를 선택해야 함
 - 이 선택 기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개방 사회로 유도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이란 것을 전제로 함

- 정부는 북한의 발사 유예를 유도하는 한편, 발사 후에도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화 지속 노력이 필요(☞ < 표 3 >의 빗금 표시 참조)
 - 첫째, 국제 공조와 주변 4강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역점
 -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물론, 중·러 등 주변국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 모색을 통해 북한의 발사 저지에 외교적 총력을 다함
 - 특히,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공동 경제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북한은 미사일·핵실험 후에는 ‘통미봉남과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온 만큼,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공조 강화 (경수로 비용만을 부담한 1993년 YS 시절 상황 재현에 대비)

 - 둘째,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
 -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최대한 자제
 -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

- 셋째,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 교류를 측면 지원
 - 당국간 대화 단절 속에서, 남북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최소한의 남북 관계 모멘텀을 유지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민간의 경협 사업은 계속 추진

- 넷째, 북한을 국내 중소기업의 탈출구와 녹색 성장사업의 시범단지로 활용하여, 현재 경제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활용
 - 북한을 단순한 위험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남북 경협을 한반도의 평화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
 - 개성공단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 2008년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연 2.5억 달러의 매출은 물론, 8.8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7,500명의 남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 또한 북한 산림녹화 공약 사업을 통한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 동시 추진

- 다섯째, 국내외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
 -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시중 유동성 부족을 지원
 -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대책 마련

< 참고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주요 일지

일 시	주 요 내 용
1975년	- 중국에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 미사일 DF-61 구입 · 미사일 연구 개시
1981년	- 이집트에서 스커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24기 도입 · 모방 생산 착수
1984년	-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 시험
1985년	- 사거리 320~340km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
1989년	- 사거리 500km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
1993년 5월 29일	-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 · 사거리 1,300km 추정
1998년 6월 16일	- 조선중앙통신이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인정
1998년 8월 31일	- '대포동 1호' 발사 ·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주장 · 사거리 1,800~2,500km, 무게 25톤(추정), 3단식 미사일
1999년 5월 18일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18~24) · 핵시설과 무관 결론
1999년 6월 8일	- 북한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8~15) <1차 연평해전>
1999년 9월 4일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발표
1999년 9월 12일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 합의 결과
2001년 5월 3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 란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발사 유예' 선언
2002년 6월 18일	- 한·미·일, 북한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
2002년 6월 29일	-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2차 연평해전>
2002년 9월 17일	- 제1회 북일 정상회담 결과 '평양선언' 발표 ·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 삽입
2003년 2월, 3월	-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사거리 100km
2003년 4월	- 실크웜 미사일 시험 발사 · 서해상에서 육지로 발사, 사거리 60km
2003년 10월	- 동해안에서 동해 상으로 중국제 실크웜 추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2004년 5월 22일	-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 내용 재확인
2005년 2월	-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주장 대두 · 미국 중앙정보국 포터 고스 국장

2005년 2월 10일	- 핵 보유 선언
2005년 5월	-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2005년 6월	-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겠다 ·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
2006년 6월 1일	- 미국이 압력 강화를 지속하면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2006년 5월 19일	- 일본 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언급
2006년 6월 12일	- 미국 관리,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2006년 7월 5일	-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기 등 총 7기 발사
2006년 7월 16일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 북한은 즉각 거부
2006년 10월 4일	- 북 외무성 핵실험 강행 성명 발표
2006년 10월 6일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 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 채택
2006년 10월 9일	- 북핵실험 강행(오전 10시 35분경)
2006년 10월 14일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가결
2006년 10월 17일	- 미국, 북한 핵실험 공식 확인
2006년 10월 18일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일·한·중·러 순방(18~21)
2006년 10월 27일	- 한국, '한반도 수역서 PSI 불참' 입장 발표
2007년 10월 11일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11~19)
2008년 3월 28일	- 북한, 서해상에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사거리 40km
2008년 5월 31일	- 북한, 평안남도 증산 인근 서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2008년 7월 11일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2008년 10월 11일	- 미국, 북 테러지원국 해제
2008년 11월 21일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2008년 11월 24일	- 북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 관광 중지 등 「12.1조치」 통보
2008년 12월 17일	- 북한군부 인사 5명, 개성공단 실태조사
2009년 1월 17일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 성명 발표
2009년 1월 30일	- 북 조평통 성명 ·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사항의 무효화와 북방한계선 폐기' 발표
2009년 2월 27일	- UN주재 북한공사, '예정대로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것을 공개 발표
2009년 3월 4일	- 노동신문, '우리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천백 배 보복'
2009년 3월 5일	- 조평통, 북한 영공 통과하는 남한 민간항공기의 안전 담보 불가